

민생경제 위기... '반도체특별법·전력망법' 등 與野 합의 절실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여야 이견 차로 상임위 계류 중

與 “이달 국회서 일괄처리 제안”
野 “與, 계속해서 법안 논의 회피 시 패스트트랙 지정 등 대책 강구”

연말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일련의 정국 혼란 사태로 국회의 민생·경제 입법까지 모두 정지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는 법안의 연초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영 선포,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민생·경제를 이끌고 뒷받침해야 할 정치가 경제를 집어삼켰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다행인 점은 2024년 말 여야 대표가 만나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약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하면서 민생·경제 합의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의 1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과 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여야를 초월해 발의되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는 등 경제계의 숙원 법안이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에 세액공제를 넘어 '직접 보조금'을 주는 조항을, 야당은 대규모 정책 금융 지원 방안을 담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여당안에 담긴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야당이 문제 삼으면서 산자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력망법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급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력망법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전력망 설치 과정의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전력망법도 22대 국회 출범부터 여야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앞다퉀 발의했으나, 상임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준위 방폐장법'과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제재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등이 여야의 합의를 이뤘거나 이견차가 있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상황에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미래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해의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을사년은 정치가 국가 경제를 든든히 지원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국회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까지 태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지

난해 12월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지원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은 산자위 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입법 논의를 회피한다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함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12월31일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당 대표 회동에서 국정협약체 구성을 합의했다"며 "신속한 실무 협의를 거쳐서 외교 안보의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조속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논란

우원식, 이르면 금주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회의장)

崔 취사선택으로 국회 권한 침해 입장 현재, 권한쟁의 심판 빠른 검토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면서, 8명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들을 선별적으로 임명한 점은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이번주 중 현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또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행위의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이 많다. 그렇기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원식 의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취사선택했으니, 국회의 권



정계선(왼쪽),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것이 권한인데, 이미 선출된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걸러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두고 현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을 정하면서, 이에 대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현재가 시비를 가리는 절차다. 만약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여야 합의보다 빨리 현재 9명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권한대행을 계속 바꿔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다른 경로



로 9인 체제 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정치권은 현재가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을 빠르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주체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기 때문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법권의 수장으로서 내는 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직접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위헌적인 상황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임시 지위를 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syj@

與, 제주항공 참사 성금 모금·특별법 제정

“유가족 음해·비방 가짜뉴스 퍼져 관계 당국 신속 수사·처벌 촉구”

국민의힘이 2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성금 모금·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 국민의 힘이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 당 차원에서 성금 모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가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추모해 주시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취임 첫 행보로 무안국제공항으로 내려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책을 논의했던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도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어제 새해 첫날을 맞아, 무안으로 가서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고 왔다. 우리당 의원님들께서도 국가 애도 기간 동안, 무안으로 방문하여 유가족을 위로할 계획”이라며 “국정이 몹시 혼란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국가적 참사 앞에서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유가족 위로와 지원은 물론,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생활·의료·심리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여객기 참사에 대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퍼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1일) 직접 유가족을 만나보니, 유가족을 음해, 비방하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범죄행위다. 관계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무안국제공항에 머무르며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179명 전원의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아직 그 대다수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족들의 요청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참사의 원인 규명도 서둘러야 하겠다. 하지만, 선부른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가적 재난 해결과 국민적 아픔을 치유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